

민주, 호남 민심 '비상'...강성 지지자 득세·'1인 정당화' 우려

이재명, 호남서 누적 78% 득표...투표율 ↓ 박용진 "민주당에 대한 당원들 체념 지속"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80%대 턱밑까지 치고올라가며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낮은 투표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권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을 밑돈 것을 놓고 비명계를 중심으로 반성하고 강성 지지파가 활개를 치는 '민주당을 향한 경고음', 강성 대표로 대변되는 '1인 정당화 우려'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강경 지지층에 전통적 지지층인 호남이 밀려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친명계에선 당원 숫자가 늘어난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에 과도한 의미부여를 한다고 애써 외면하려는 모습이다.

지난 21~22일 이틀간 열린 민주당 전북·광주·전남 순회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는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 78.35%(20만4569명)를 기록하며 21.65%(5만6521명)의 박용진 후보를 50%포인트 넘는 격차로 따돌렸다.

하지만 호남권 권리당원 투표율은 전북(34.07%), 광주(34.18%), 전남(37.52%)을 합쳐 평균 35.49%로, 전국 누적 투표율(36.43%)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 117만9933명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42만1047명)의 투표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친 셈이다.

낮은 투표율을 문제삼아온 박용진 후보는 2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 민주당 지금 상황에 대한 당원들의 불신임"이라며 "감정적으로는 실망감이긴 하지만 상으로는 절망적 체념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주류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저조한 호남 투표율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큰 경고음"이라며 "승부가 거의 결정되다시피 하나가 별로 흥미를 못 끄는 측면도 있고 또 당의 일부 소수, 일부 강성 그룹이 과다 대표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뒷받침해왔던 당원들이나 당의 온건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뒷전에 밀려나는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친문 운영진 최고위원 후보 역시 전남 전남 연설회에서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 나온 투표율이 참으로 충격적이고 무서운 숫자"라며 전북 투표율을 언급한 뒤 "당원이당을 냉소하고 전당대회를 외면하는 현실이 부

끄럽고 두렵고 걱정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친명계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낮은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실망과 불만이 반영된 것이지 이재명에 대한 비토라고 보긴 어렵다"며 "그나마 이재명에게 호남이 마지막 기대를 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는 결국 정공법"이라며 "이 후보가 말해온 '유능한 민주당'을 실제 성과로 보여줘 정치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다만 일각에선 투표율 '착시' 현상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숫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전체 투표자수는 늘어도 '모수'가 커짐에 따라 투표율은 상대적으로 낮아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해찬 전 대표가 당선됐던 2018년 8·25 전당대회의 경우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71만799명이었고 투표율은 34.68%(24만6496명 참여)이었다. 21대 총선 직후 권리당원 가입이 늘었던 2020년 8·29 전당대회 역시 권리당원 선거인단 79만6886명 중 투표율은 41.03%(32만6973명 참여)였다.

이번 전당대회 권리당원 선거인단 117만명으로, 2년 전보다 40% 넘게 늘어난 셈이다.

절대치로는 이미 지난 전당대회 투표 참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광주 합동연설회가 열린 21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지지자들과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자수를 상회한다는 지적도 있다. 중도 사퇴한 강홍식 후보를 제외해도 현재까지 투표한 권리당원은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를 합쳐 26만1090명으로, 앞으로 남은 서울(20만6918명)과 경기(23만3599명) 순회경선에서 전국 평균 투표율(36.43%)만 나와도 역대 전당대회 권리당원 최대 투표수를 기록하게 된다. 실제 지난 호남 경선까지 이재명 후보의 누적 권리당원 득표수는 20만4569명(78.35%)로, 서울과 경기를 제하더라도 지난

2020년 전당대회 때 이낙연 전 대표의 득표수(20만8375명)에 근접하고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뉴시스에 "6년 전 2016년 전당대회만 해도 20만명이던 권리당원이 6배 가까이 늘어났다. 늘어난 선거인단 숫자만큼 투표율이 정비례해서 늘지는 않는다"며 "그만큼 민주당의 몸집 자체가 커진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환기자

민주 "특별감찰관 임명, 국회 요청오면 신속히 할 것"

주호영 사과요구에 우상호 "사과할 사안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및 사과 요구에 대해 절차대로 진행하면 될 것이고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2일 오전 회의에서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든 법을 지키지 않은 채 직무유기를 했다.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 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기자회견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며 "특별감찰관 임명할 거면 하고, 아니면 아닌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우 위원장은 "전 정권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 사실 공수처를 만들었을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한 것"이라며 "제가 특별감찰관 임명 얘기를 꺼낸 것은 대통령실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견제 기능, 감찰과 견제를 위해서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어쨌든 정부가, 대통령실이, 요청해야 국회에서 임명할 수 있으니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 할 생각이 없으면 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것

이고,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손해겠다. 제가 볼 때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더 손해다. 결정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하는 거라 생각한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요청이 오면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보면 정부에서 국회로 먼저 공문을 보내면 국회 절차가 시작된다. 형식적인 것이지만 여야 협의를 먼저해서 절차를 밟아도 된다. 보통 그렇게 해왔다"고 보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공문을 통해 특별감찰관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 국회도 거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면 될 일 아닌가"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문제도 그동안 규정과 법이 있지 않았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고 국회가 거기에 맞춰서 논의를 하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광주시의회, 소통과 공정 촉구

민선9기 광주시의회가 광주시에 대해 "인사가 만사"라며 집행부와 의회간 원활한 인사교류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기관장 인사를 촉구했다.

정무장 광주시의회 의장은 22일 제309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 임무를 수행할 인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모든 조직의 공통과제"라며 "그럼에도 최근 하반기 정기인사와 관련해 집행부와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의회권한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반쪽자리 인사권에 그치고, 조직권과 예산권도 없어서 한계도 분명하다"면서 "이런 한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행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등

도 개선이, 단기적으로는 적극행정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기정 시장도 의회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역지사지로 양 기관이 배려하는 가운데 협력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희윤(남구3)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사만사, 즉 사람의 일이 곧 모든 일"이라며 "시 산하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시 공공기관이 33곳에 이르고, 보수 운영 실태 점검 대상기관은 22곳에 이르지만, 인사청문 대상은 8곳에 불과하다"며 인사청문회 확대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기동재본부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